김두관 "어대명은 정권교체 장담 못해"… 완전개방형 경선 촉구

대선 출마 후 첫 행선지로 광주 방문
"어대명 경선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권력 상호견제·강력한 자치분권 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첫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이 8일 광주를 방문해 '어대명(어차피 대선은 이재명) 경선'으로는 정권교체를 장담할 수 없다며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대명 경선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국민통합 정치와 개헌을 실천할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년 저는 일극 패권정치의 광풍속에서 조롱당하며 정치인이 소신을 지키는 게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잘 알고 있다"며 "변방의 작은 다윗이 어떻게 거대한 패권 정치의 강고한 벽을 깨트리는지 보여주겠다"고도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제7공화국을 열 수 있는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불순한 세력이 다시는 민주공화국의 소중한 가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헌법을 개정할 절호의 기회"라며 "제7공화국을 여는 것이 정치혁명의 길이자 사회대개혁의 시작이다. 제7공화국 정부는 실질적인 주권재민, 국민권력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권 민주주의 시대를 제안하며 국회의 입법권 남용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 단원제 국회의 권력을 분산해 권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토록 하고, 제1당의 입법권 남용을 제약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민통합, 정치개혁은 허공에 떠도는 의미 없는 말이 된지 오래다. 자신의 당, 정파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철벽처럼 굳어진 극단적 대결 정치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협치와 분권의 민주주의를 세우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시각 여의도 국회 앞으로 달려가며 1980년 계엄군의 총칼에 적수공권으로 맞섰던 광주시민의 두려움과 용기를 떠올렸다"며 "오늘 이곳 광주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혁명의 대정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뉴시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도, 대선 공약 핵심 과제 20건 확정… 1호는 '국립 의대 신설'

AI슈퍼클러스터·호남권 메가시티도 포함… 각 정당·후보에 건의

전남도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발맞춰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건의할 대선 공약을 8일 확정, 발표했다.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석유화학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등 75건이 포함됐다.

전남도가 제시한 대선 공약과제는 핵심과제 20건과 분야별 지역발전 과제 35건, 제도 개선과 국정제안 과제 20건 등 모두 75건이다. 예산 소요사업비는 191조9112억원으로, 국비가 105조9077억원, 지방비가 3조3683억원, 민간자본이 82조6352억원 등이다.

제1호 공약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전남 국립 의대 설립으로 정했다. 이어 전남 경제의 버팀목인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가 2, 3호 공약으로 분류됐다.

이밖에 조선·해양 AI 초격차 자율제조 특구 조성, 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에너지 신도시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및 미래 100년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도 핵심 과제에 담겼다.

AI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와 K-GIM(김)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거점 조성 등 전남 미래발전을 이끌 신성장프로젝트와 초광역 SOC, 농어업, 관광·문화 등을 망라한 최우선 과제도 포함됐다.

특히 지난 3월 전남·광주·전북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협약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사업과 관련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확보, 초광역 SOC사업인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고흥~세종), 서해안철도(군산~목포)를 호남권 초광역 협력모델로 제시했다.

20대 핵심과제 외에도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 의견을 모아 지역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신성장동력, 핵심 SOC, 미래농어업, 관광·문화·휴양, 인구·복지 등 5개 분야별로 발굴, 분야별 지역발전 과제 35건도 발표했다.

신성장동력 분야는 미래항공모빌리티 연계 남부권 초광역 항공인프라 구축, 글로벌 해저 환경 전력계통 개발, 솔라시도 AI 자율제조 실증 허브 조성 등 9개 과제, SOC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교) 국가관리 지원, 스마트통합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지방도 연륙·연도교(해상교량) 국비 지원 등 5개 과제다.

미래농어업 분야는 K-wine(전통주) 산업 클러스터,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체계,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스마트 농업 인프라 확충 등 7개 과제, 관광·문화·휴양 분야는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 2031 국제정원박람회, 국립 고흥 다도해산림치유원 조성 등 8개 과제, 인구·복지 분야는 청년 특화구역, 외국인 특화지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전남센터 건립 등 6개 과제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국정 과제로 반영해야 할 정책공약으로는 국가 출생기본수당 신설,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 정책화, 인구소멸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 전남형 만원주택 전국 확대, 비수도권 벤처기업 육성지원 특례 강화,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산지 쌀값 안정화, 농업소득안정을 위한 기금 및 직불금 10조원 확대 등 제도 개선과 국정 제안과제 20건도 마련했다.

윤진호 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남이 가진 비교우위 자원과 여건을 토대로 AI 등 급변하는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전남발전에 꼭 필요한 중대형 프로젝트를 균형있게 발굴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각 정당과 후보자를 상대로 공약과제를 건의하고, 대선 공약으로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호남 주자' 김영록, 두 달 만에 대선 하차 까닭은

민주개혁세력 결집, 民 대선 승리에 부담줘선 안된다고 판단
영광·담양 재선거 민심 이반, 경선성적표 놓고 정치적 부담도
도정현안도 마음의 짐… 내년 지선 전남지사 3선에 집중할 듯

김영록 전남지사가 '6·3 장미대전'으로 치러질 제21대 대선 열차에서 중도 하차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진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지사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호남 대표 주자론'를 내걸고 출마를 결심한 지 두 달 만이다.

김 지사는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개혁 세력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며 "정권이 교체돼야 내란종식도 가능하고 국민통합의 길도 열리는데 이러한 시대정신의 최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교체를 위해선 국민과 함께 하는 하나 된 민주당이어야 한다"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대망론에 말을 아껴오던 김 지사는 12·3 비상계엄 두 달 만인 지난 2월3일, 국회에서 지역 언론인들을 만나 "대선출마 결심을 굳혔다"며 대선열차에 올라탔다.

이후 '호남 대표주자'를 앞세워 정치적 보폭을 넓혀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고, 동교동계 등 정치권 원로들과의 비공개 회동을 통해 민주세력 지평 확장에 공을 들여왔다. SNS와 1인 시위, 거리 투쟁과 포럼 등을 통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윤석열 파면'과 '이재명 무죄'를 줄기차게 강조해왔다.

일거수 일투족에 친문(친문재인), 친명(친이재명) 행보라는 엇갈린 해석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통합과 개헌, 국가대개혁과 정치리모델링, 호남정치 복원 등을 키워드로 정치적 행보를 분명히 했다. 지방에서 18년, 중앙에서 10년, 국회 8년, 농림부장관 8개월 등 다채로운 경험을 토대로 '김영록표 정책' 구상에도 힘을 쏟아왔다.

완주를 약속했던 김 지사는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 직후 "도민들의 의견을 더 잘 듣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돌연 신중 모드로 돌아섰고 결국 나흘 만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호남대망론 아래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지, 컷오프 통과 후 중도 사퇴할 지, 예비경선에서 낙마할 지, 아예 불출마할 지 다양한 경우의 수 가운데 고심 끝에 결국 출마의 뜻을 접은 것으로 풀이된다. 명분은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고, 답은 '이재명 지지'였다.

"역할을 200% 수행했다"는 긍정평가와 함께 "출마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 "친문, 친명 사이에서 선명성이 애매했다"는 일부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호남맹주' 민주당이 고전한데 이어 지난 2일 담양군수 재선거에는 조국혁신당에 밀려 아예 패배하는 등 호남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당내 호남 지분을 놓고 분열하는 모양새가 부담이 됐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내 대권 잠룡들에 비해 낮은 지지율과 컷오프 가능성, 경선성적표가 액면 그대로 호남 정치의 위상과 현주소로 받아 들여질 수 있는데 대한 정치적 부담 역시 고민을 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립 의대 신설,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인공지능(AI) 수퍼클러스터 허브 등 대형 현안에 대한 도백(道伯)으로서의 책임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후 향후 계획에 대해 "앞으로 도정에 열심히 집중하면서 전남 발전을 위해 계속해 매진할 생각"이라며 "새 민주정부 아래서 호남이 지역 여건이나 발전, 인물, 균형 면에서 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이 대표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이날 발표한 대선공약 과제만도 의대 설립, 석유화학 메가프로젝트, AI 슈퍼클러스터 등 75건에 필요 예산만 국비와 도비, 민자를 합쳐 191조 원에 달해 도지사로서 갈 길이 멀다.

정치인으로서의 넥스트 스텝을 두고는 대선이 지워진 만큼 당장 내년 지방선거 3선 도전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도지사 후보군으로는 4선 이개호 의원과 '3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행정부지사 역임 후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다음 2022년 민주당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연임에 성공하고, 농림부장관까지 거친 화려한 스펙 탓에 4기 민주정부 호남총리론도 늘 언급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의 파이' '호남의 파이'를 키우는데 일조하고 경선이 끝난 후에는 민주당이 하나가 될 있도록 힘을 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란 종식과 당내 통합, 개헌 공방, 진영갈등 속에서 고민이 깊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